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展望

金世源*

目 次

1. 機能主義的 接近의 意義
2. 경제적 여건 및 무역구조
3. 異質體制間 經濟거래의 사례
4. 경제적 접근의 형태
 - 1) 모형의 선정
 - 2) 원칙

1. 機能主義的 接近의 意義

70年代 以後 南北韓間 接近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特徵中의 하나는 政治的 要因이 強하게 지배하는 北韓側의 高집으로 인하여 하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韓國側은 70年 朴大統領의 8·15선언을 계기로 점진적·技能的 그리고 단계적 接近을 提案하였으며 그 後 政治面에서는 물론 非政治的 諸分野에 있어서도 協力方案을 구체적으로 提示해왔다. 特히 南北韓間 經濟去來의 推進에 관한 提案은 여러가지 意義를 갖는데 한마디로 70年代 初 以後 韓國이 추구하여 온 政經分離 基調의 代表的 表現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서울대·교수

註) 이 논문은 1984년 6월 濟州大學校 統一安保研究所에서 개최한 統一問題 學術세미나의 주제발표 논문임.

國內外的 諸與件이나 평양 當局으로 미루어 政治的 接近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經濟的 實利를 바탕으로 兩地域間協力の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立場은 第五共和國의 출범 이후 全大統領에 의한 兩則의 首腦 會議提議 그리고 잇따라 발표된 南北韓間 交流의 實現을 위한 細部計劃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現實的인 구체적 提案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始終一貫 「政治優位」라는 硬直的, 그리고 閉鎖的 立場을 고수하여 오고 있다. 政治的 統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前提로 하지 않는 限 南北韓間 어떠한 協商에도 임할 必要가 없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即 經濟를 비롯한 非政治的 諸分野에 있어서 各 形態의 協力도 政治的 統一問題로 귀착되므로 根本的인 原則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된다는 자세이다.

1954年 「제네바」會談의 提議以來 經濟交流에 관한 提案을 해왔으나 實現性이 없는 政治的 口號에 그쳤으며 그후 登場한 「代表者 會議」 또는 「聯邦制」案은 평양側이 有利한 政治的 與件에만 집착하므로서 事實上 큰 意味를 갖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볼 때 兩側의 주장이 平行線을 계속하는 限 體制的 接近을 의미하는 政治協商은 事實上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 하등의 意義도 없다. 北韓이 無條件對話의 再開를 수락하고 妥協을 前提로 實現possible한 提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形態의 協商도 進展될 수 없다.

事實 반드시 政治體制的 接近에 관한 논의를 前提로 하여야만 經濟交流의 開始가 可能的 것은 아니며 우리는 兩獨間, 또는 東西間 經濟協力 및 貿易去來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經濟統合이 一定단계에 이르면 政治的 協力 내지는 政治統合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으며 EEC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도의 단계에 도달할때 까지 非政治的 次元에서 經濟去來를 開始, 強化할 수 있는 可能性 또한 부인 할 수 없으며 더구나 政治統合을 前提로 한 協商이 하등의 進전을 볼 수 없는 南北韓의 경우 이를 위한 보다 우회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相反되는 兩體制的 접근을 위한 先決條件들이 하나도 解決되지 않은 상태에서 統一이 요원한 目標로 남을 때 經濟去來의 開始 → 非政治部門에서의 協力 → 協力の 強化 및 擴大 → 部門別 統合 → 政治的 對話의 開始 → 政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展望

治部門에서의 協力 統一의 推進과 같은 公式를 택할 수 있다. 따라서 對內與件의 變化, 꾸준한 對話를 통한 妥協의 모색, 兩地域內 政治的 發展 및 國民大多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體制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 질 때까지 모든 政治的 接觸과 오히려 經濟交流의 擴大, 나아가 經濟統合의 推進에 그 취지가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2. 經濟的 與件 및 貿易構造

우선 經濟的 與件을 비교하면 北韓은 賦存資源面에서 當初 工業化에 有利한 立場에 있었다. 그러나 市場經濟와 計劃經濟와는 相反되는 體制, 그리고 外向의 工業化와 內向의 工業化라는 開發戰略上의 差異로 인하여 經濟發展에 있어서 韓國이 훨씬 앞서는 격차를 나타내게 되었다. 한 例로 資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82年 GNP 규모를 對比하면 거의 5倍, 그리고 '72~'73年 까지 비교되던 個人當 GNP에 있어서 同年에 이르러 약 2.3倍의 격차를 각각 보이고 있다.

(〈表I〉 參照)

〈表I〉 南北韓 主要總量指標 (1982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人 口	萬名	3,933	1,849	2.6 : 1
人 口 增 加 率	%	5.7	2.23	1 : 1.4
經濟活動人口	萬名	1,508	900	1.7 : 1
面 積	km ²	99,022	122,098	1 : 1.2
G N P	經常價格億弗	657	136	4.8 : 1
1人當GNP	經常價格弗	1,671	736	2.3 : 1
經濟成長率	實 質 %	5.5	4.8	1.1 : 1
軍事費對GNP	%	6.4	23.8	1 : 3.7

資料: 國土統一院, 南北韓經濟現況 比較, 1983年

即 韓國은 軍事的인 고려보다는 經濟的인 效率性을 우선으로 60年代初 資本, 技術 및 勞動 등 부존자원을 고려하여 비교우위가 높은 勞動集約的 輕工

業부터 開發에 착수하여 輸出主導型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치중하여 規模面에서 相當한 成果를 거두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當初부터 經濟的 效率性보다는 軍備增強을 더욱 重視하여 重工業 一邊倒의 開發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北韓은 「스탈린」 式의 一國社會主義를 모방하여 公産권內에서도 가장 排私주의적인 經濟體制를 구축하기에 努力하여 왔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國際經濟的側面에서의 利得이 相對的으로 소멸됨 으로서 60년대 까지만 하여도 앞서 있던 鑛業의 生産能力이 대부분의 제조업 部門에서 최근 韓國에 비하여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南北韓間農業部門에서 비교된다고 한다면 輕工業 및 化學工業에 있어서 韓國이 거의 全部門에 걸쳐 우위에 있는 반면, 北韓은 一部 鑛物資源의 生産에 있어서 有利한 立場에 있다. 한편 기계, 철강 및 金屬을 비롯한 重工業部門의 경우 比較될 수 있는 水準이며 兩地域間 交流가 開始되었을 때 가장 큰 水平分業의 여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北韓當局이 '80年代 重要 部門 別 生産目標은 <表2>와 같다.

<表2> 北韓의 '80年代 10大展望 目標

區 分	單 位	'89年目標值	備 考
電 力	億 KWH	1,000	成分含量基準時 164
石 炭	萬 噸	12,000	
강 철	"	1,500	
有 色 金 屬	"	150	
化 學 肥 料	"	700	
시 멘 트	"	2,000	粗 穀 基 準
織 物	億 m	15	
알 곡	萬 噸	1,500	
水 産 物	"	500	
간 처 지	萬 정보	30	

資料: 조선로동당 제6차大會 金日成報告, 1980.10.10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展望

다음 對外去來를 비교하면 우선 貿易에 있어서 兩地域間 約 14 倍에 달하는 規模上의 격차 이외에도 ('82 年) 構造上의 여러 차이를 엿 볼 수 있다.

(< 表 3 > 參照)

< 表 3 > 南北韓 輸出入 推移 (通關基準 億弗)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1970	8.4	19.8	28.2	3.7	4.4	8.1
1975	50.8	72.7	123.5	8.1	10.9	19.0
1980	175.0	222.9	397.9	14.4	17.4	31.8
1981	212.5	261.3	473.8	13.0	16.0	29.0
1982	218.5	242.5	461.0	15.0	18.0	33.0

資料 : < 表 1 > 과 同

두드러진 特徵中의 하나는 南北韓 다같이 구조적인 貿易收支의 不均衡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그 赤字幅에 있어서 北韓의 경우 相對的으로 大規模라는 점을 들 수 있다. '73 ~ '74 年을 계기로 심화되기 始作한 北韓의 對外貿易 赤字는 大部分 對西方貿易에서 發生하였는데 이러한 國際收支 壓力은 經濟的 側面에만 국한시킨다면 南北韓間 協力的 可能性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물론 北韓이 國際收支의 壓力, 即 外債償還不能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事實이 南北韓間 去來를 저해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기는 하나, 反面 同部門에서의 協力 또한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살펴더라도 60 年代까지 公産權이 絶對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70 年에 들어서서 6 個年 計劃의 실시와 함께 對西方 貿易이 급격히 增加하여 '74 年 50 %를 上廻하였으며 그 후 계속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 表 4 > 參照). 이 점 역시 對西方을 통한 南北韓間 去來의 여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品目別 貿易構造面에서 약간의 補完的인 경향을 살필 수 있으나 特記할 것은 北韓의 경우 經濟計劃의 수행을 위한 補助的인 수단으로 貿易이 행해지므로 輸出入構造 그 自體가 產業構造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例로

〈表4〉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100 만불)

年 度	合 計	共 産 圏	比 率 (%)	自 由 國	比 率 (%)
1971	866	734	84.8	132	15.2
72	1,039	796	76.6	243	23.4
73	1,340	820	61.2	521	38.8
74	1,980	918	46.4	1,062	53.6
75	1,907	1,032	54.1	875	45.9
76	1,487	984	66.2	503	33.8
77	1,407	886	63.0	512	37.0
78	1,951	1,167	59.8	784	40.2
79	2,585	1,500	58.0	1,085	42.0
80	3,179	1,683	52.9	1,496	47.1

資料: 國土統一院 綜合推計值

重工業 建設에 필요한 輸入需要를 충당하기 위하여 一次産品을 大量輸出하는 例가 許多하다. 따라서 南北韓間 貿易去來 可能品目を 선정하기 위하여 輸出入 構造는 하나의 指標에 不遇하며 오히려 産業構造의 比較가 더 精確한 자료를 提供할 수 있다고 본다.

3. 異質體制間 經濟去來의 事例

南北韓 經濟去來의 方向을 설정하기에 앞서 異質體制間 去來가 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자 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異質體制間 去來는 東西貿易型 (日本-北韓 貿易도 이에 포함됨), 中共-臺灣 貿易型 및 東西貿易型의 셋으로 종합될 수 있다.

一般的인 東西貿易型은 國交의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去來 수행의 「메카니즘」을 보여 주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나 異民族, 異國家間 關係라는 點에서 南北韓間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中共-臺灣型은 대치, 나아가 敵對關係에 있는 分斷國家間 貿易의 가능성을 實證하여 준다.

中共의 立場은 「아데나워」時期的 西獨 경우에 比할 수 있으나 그 強度에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展望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卽 當時 東獨의 不承認 그리고 統一目標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西獨이 兩獨間 貿易을 특수한 形態의 內獨貿易으로 정의하였던데 反하여 中共은 보다 一國內 貿易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臺灣이 공식적으로 對中共 貿易을 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基本條約의 체결, 그후 長期貿易協定の 체결과 함께 兩獨貿易은 국가간 貿易의 성격을 더 띄게 되어 中共-臺灣 경우와는 또다른 法的 側面을 갖게 되었다.

中共-臺灣間 貿易은 주로 「홍콩」 「마카오」 및 日本과 같은 第三地域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화교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一旦 第三地域에 수출된 후 中共 및 臺灣에 각각 再輸出되므로 兩地域間 직접 結核에 따르는 問題는 아직까지 登場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分斷國間 貿易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公式的인 直接貿易의 가장 成功的인 例가 바로 東西獨間 去來라고 할 수 있는데 韓國의 對 北韓 經濟交流의 公式的인 提案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 케이스」로 지적될 수 있다.

兩獨間 去來의 경험을 南北韓間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및 示唆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우선 相異한 體制下의 分斷國家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는 統一을 논함이 없이 經濟를 비롯한 諸分野에서의 去來 및 交流가 가능하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要因도 相互 意志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特히 統一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을 때 이러한 接近이 分斷의 既定事實化 永久化보다는 統一을 용이케 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兩獨間 交流가 與件에 의하여 또는 자연의 필요에 따라, 비록 制限的인 이기는 하나 이미 分斷 初期부터 지속되어 왔는 데 비하여 南北韓間 교섭이나 去來의 開始에 있어서는 쌍방간 政治的 合意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卽 非政治的인 分野에 있어서의 交流이기는 하나 이 역시 南北韓當局間 政治的 決斷을 필요로 한다.

셋째, 兩獨間의 경우 一民族 혹은 二民族(東獨西獨間 立場의 차이가 있음) 이던간에 相互 基本조약의 체결을 통한, 그리고 現實的인 制約을 充分히 인정한 相互國家承認 關係라는 점에서 「協力型」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에 있어서는 相互交流과 관련된 모든 提案이 統一에 이르는 「統

一指向型」이 아니고서는 수락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을 外面하는 경우 傳統的 單一民族性을 배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內外的으로 大義名分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네째, 兩獨關係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西獨이 모든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事實이며 이러한 位直가 오늘날 協力期를 存在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基本的인 要因이라고 생각된다.

兩獨間 關係의 展開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教訓은 韓國이 南北關係를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安定의 바탕 위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며 이는 同時에 國防面에서의 우위를 可能케 할 수 있다. 또 體制의 長點을 과시할 수 있도록 民主主義의 土着化도 併行해야 함은 물론이다.

4. 經濟的接近의 形態

1) 模型의 選定

南北韓間 經濟去來는 EEC의 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先進諸國間 適用, 發展되어 온 기능주의적 接近模型과는 달리 獨特한 (Sui generis)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이유로서 첫째, 史上 최초로 異質體制間 經濟統合을 시도하는데 따르는 제반 위험 및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相反되는 理念以外에도 相異한 經濟體制로 인하여 短期間에 特惠地域 → 自由貿易地域 → 關稅同盟 → 共同市場 → 經濟同盟의 순서로 발전 시키는 경우 오히려 시장교란과 경제질서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兩地域이 特殊한 경제적 여건아래 있으며, 특히 정도의 차이가 크기는 하나 시장개입적인 要素를 다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例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 갖가지 形態의 市場歪曲 (distortions), 각종의 政府支援策, 그리고 物價, 通貨價値의 不安등 허다하다.

끝으로 兩地域間 產業構造 및 경쟁력 또는 技術面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部門別로 크게 補完關係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市場統合의 추진은 一方에 의한 地方의 市場支配 또는 經濟的 利益配分에 있

어서의 逆機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現想的인 형태는 南北韓間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特히 경제개발 계획 및 政策遂行의 쌍방간 調整을 통한 合意的 分業(agreed Specialization)에 입각하여 共同市場 및 經濟同盟을 部門別로 同時에 추진하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2) 原 則

兩地域間 經濟交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原則은 상호호혜성(reciprocity) 即 실질적인 동등대우로서 이에 따르는 이익이나 복지가 形평에 입각하여 配分되어야 한다. 特히 經濟統合의 추진과정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合意的 分業에 立脚하되 「南北型」의 수직분업보다는 先進國間 貿易形態인 水平分業의 추구가 양측에 의한 妥協의 여지를 더 크게 갖고 있다. 即 同一產業內 小部門別로 兩地域의 산업입지 및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開發創出의 效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對象部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一方의 우세한 工業力이 他方을 지배하는 현상을 초래할 때 經濟的 形평은 깨지고 妥協은 이루어질 수 없다.

3) 단계별, 부문별 接近

前述하였거니와 南北韓間 經濟去來에 관한 提案은 궁극적으로 「韓民族 經濟共同體」의 설립을 통한 平和的 統一의 추진과 같은 단계별 長期的 目標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第1단계 작업으로서 단순한 經濟去來의 開始에 있어서는 兩獨關係의 전개에서 볼 수 있는 수행 「메카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는 技術的 側面에 국한하며 國家間 貿易보다는 韓半島內 地域間 貿易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兩獨의 例에서와 마찬가지로 決濟協定(Payment agreement)의 체결이 필요하며 계산 단위는 현재 國際通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DR(특별인출권)을 사용하거나 KUA(Korean Unit of Account)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지역의 通貨評價變更에 따라 去來商品 價格을 調整할 수 있다.

初期 양지역내 需給條件 또는 對外輸出構造를 고려하여 去來對象品目を 선정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살핀바와 같이 北韓의 수출구조가 비교우위 산업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水平分業의 原則 및 產業政策調整이라는 차원에서 相互輸出品目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단순한 貿易去來와 經濟共同體의 수립간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이다.

前者가 일반적으로 東西貿易의 성격을 띄는 데 반하여 後者는 相異한 經濟體制의 調整 내지는 접근 그리고 機能主義的 接近에 의한 平和的 統一에 대한 意志를 전제로 하며 또 이러한 단계에로의 移轉이 없이는 政治的 統合이란 거의 不可能하게 보인다.

이와같이 貿易去來가 원만히 발전되고 또 政治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第2단계에서의 理想的인 경제협력의 형태는 그 자체가 韓半島內 平和의 정착에 기여하는 속성을 내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南北韓 「에너지」 鐵鋼共同體의 수립은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政治·軍事的으로도 큰 意義를 갖는다.

「에너지」 鐵鋼共同體의 설립은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하는 제반 제도적 保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卽 에너지 및 鐵鋼品目的 생산량, 製品形態, 最終形態, 流通過程, 價格 및 輸出入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南北韓間 상호감시하고 조정을 기해야 한다. 또 同製品의 域內流通이 自由로와야 함은 물론 가능하다면 同部門과 관련된 資本技術 및 勞動의 自由移動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機能과 業務를 수행할 수 있는 中樞 實務機關인 일종의 管理委員會의 설치가 요청되며 중요결정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취해져야 한다.

同 共同體의 수립이 政治·軍事的으로는 重武器生産에 관한 정보교환 내지는 규제를 통하여 戰爭의 防止에 그 취지가 두어지나 經濟的인 측면에서도 상당규모의 經濟效果를 얻는다는 큰 利點을 가지고 있다.

양지역이 다같이 外國으로부터의 輸入原油에 의존하므로 共同備蓄制度를 비롯한 共同政策을 수립할 수 있으며 南北韓間 철강 및 石炭製品의 교환, 原子「에너지」의 平和的 利用 및 技術協力을 통한 代替「에너지」의 개발 등 許多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展望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갖는 「에너지」鐵鋼共動體가 수립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의 이전은 용이하다고 보며 이기간 共同市場의 대상을 우선 重化學工業部門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兩地域間 體制나 政策基調의 차이로 인하여 현격한 산업구조상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重化學工業部門에 있어서는 相互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特化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또 다같이 同部門의 深化段階(비록 部門別로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에 있으므로 상당 規模의 經濟效果라는 利益을 누릴 수도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前述한 바와 같이 兩地域間 經濟政策에 관한 協議 및 調整이 本格化할 수 있게 되며, 機械, 電子, 化學工業 또는 一次産業등 部門別로 점차 共同市場을 확대시키고 域內 流通의 운영에 따라 對外共同政策도 채택할 수 있다. 그 以外 共同基金의 설치를 통한 地域開發特定産業에 대한 支援 및 資源開發도 추진할 수 있으며 部門別로 技術協力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의 産業構造 및 競爭力에 있어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部門인 農業部門의 경우 이에 더하여 特殊한 社會·經濟的 課題가 추가된다. 따라서 兩地域內 需給構造 및 産業의 競爭力을 고려하여 輕工業部門과 農業部門에 관한 共同市場의 수립은 최종단계로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 나아가 經濟統合의 推進方向을 개괄적으로 살폈거니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問題는 비록 非政治的인 部門에 있어서의 交流라 하더라도 政治的 決定을 전제로 한다는 데에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統一을 論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北韓間 對話의 再開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1.12 및 6.5提議를 비롯한 韓國側의 提案은 이러한 의도로 이해되어야 하며 北韓側의 긍정적인 자세만이 兩地域間 去來의 추진을 論議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